

평화재단 제40차 **전문가포럼**  
THE PEACE FOUNDATION 40TH FORUM

# 천안함 사태 이후 동북아 정세변화 평가와 전망

일시 2010. 6. 10.<sup>목</sup> 14:00-17:00  
장소 평화재단 강당

## 천안함 사태 이후 동북아 정세변화 평가와 전망

- 일시 | 2010년 6월 10일(목) 오후 2:00-5:00
- 장소 | 평화재단 강당
- 주최 | 평화재단(02-581-0581)

### ● 프로그램 ●

14:00 개 회

14:05 여는말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사 회 길정우 전 중앙데일리 발행인

14:15 발 표 천안함 사태 이후 동북아 정세변화 평가와 전망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14:50 토 론 1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 론 2 김태현 중앙대학교 국가대전략연구소 소장

15:10 질의응답

15:30 휴 식

15:45 전 체 토론

16:50 닫는말

17:00 폐 회

평화재단 제40차 전문가포럼

천안함 사태 이후 동북아 정세변화 평가와 전망

퍼낸날 2010년 6월 10일 | 퍼낸곳 재단법인 평화재단 |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93-7호 서초이오빌빌딩2층  
전 화 02-581-0581 | 전 송 02-581-4077 | ptyuzi@peacefoundation.or.kr | www.peacefoundation.or.kr

미국과 중국의 협력관계로 움직이던 동아시아 정세가 천안함 사태로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추진중이고, 반면 중·러 양국은 좀 더 정확한 조사를 요구하며 북한제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북·중·러의 신 북방 삼각과 한·미·일 신 남방삼각의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듯한 상황에 대해 신냉전 체제의 등장을 우려하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정세변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미·중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재단에서는 천안함사태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동아시아의 신냉전 대립구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동아시아의 정세를 전망하고 한반도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0년 6월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윤여준

# 천안함 사태 이후 동북아 정세변화 평가와 전망

조 성 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I. 천안함 사건과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

### □ 천안함 사건과 한·미 대북공조

- 지난 3월 26일 밤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초계함 천안함이 침몰된 사건에 대해 민군합동조사단은 5월 20일에 조사결과를 발표
  - 민·군 합동조사단은 조사를 통해 천안함 침몰이 130톤 연어급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
-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담화와 안보관련 3부장관의 대북조치가 발표되었으며, 이 대통령은 국가원로회의에서 “주적개념의 부활”을 시사(5.25)
  - 통일부: 북한선박의 입출항 금지, 교역중단, 방북 불허,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보류(영유아 인도적 지원 제외)
  - 국방부: 대북심리전(확성기 방송, 대북전단 살포, FM라디오방송) 재개, 해상항로대 폐쇄, 연합 대잠훈련, PSI 훈련의 실시

- 외교부: 유엔안보리 제소를 통한 기존 대북제재의 엄격한 시행, 양자적 추가제재 시행
- o 국방부와 한·미 연합사는 6월 7~10일까지 북한의 천안함 어뢰공격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및 對潛 훈련을 서해상에서 평택 인근까지 북상해 잇달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6.4)
- 이번 훈련에는 미 7함대 소속 9만 7000톤급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號와 이지스 순양함 및 구축함 7~8척, 핵추진 잠수함 등이 참가한다고 발표

#### □ 2차 미·중 S&ED, 6.2 지방선거와 대북조치 변화조짐

- o 5.26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제2차 미·중 전략 및 경제 대화(U.S.-China S&ED, 5.24~25) 참석 뒤 잠시 방한한 뒤, 미·중 협의내용을 우리정부에 디브리핑 실시

- 클린턴 美장관은 천안함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투트랙(two-track)으로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북한의 방향을 전환하는 대응책도 필요하다"며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의 필요성 지적

※ 2차 미·중 전략 및 안보대화에서 중국측은 미국에게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1차적인 정황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중앙일보」 2010.6.9.)

- o 클린턴 방한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조치들이 유보 내지 철회

- 대북심리전 수단 가운데 확성기 방송(12곳 설치, 실시는 유보), 대북전단 살포를 유보한다고 발표했고, 강력히 추진되던 ‘주적개념의 부활’도 취소

- 6월 4일 천안함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제소했으나, ‘제재결의’ 아닌 ‘일반결의’, ‘의장성명’을 추진하는 것으로 후퇴했으나, 만약 ‘언론성명(press statement)’에 그친다면 외교적 실패로 평가받을 소지

※ 중·러 외무장관은 △한반도가 군사적·정치적 위기직전에 와 있는 점에 우려,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증거는 세계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일치(6.4)

○ 국방부와 한미연합사가 오는 6월 7~10일 항모를 동원한 대규모 한·미 연합 및 대잠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가 연기

- 아시아안보장관회의 직후 중국을 방문하려던 게이츠 국방장관의 계획이 중국정부 거부로 무산된 뒤 2~3주 한·미 훈련의 연기 발표하고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도 취소

- 김태영-게이츠 한미 국방장관 회동 직후, 한미 연합훈련을 △‘한국의 주도’(美 항모 불참), △‘유엔안보리 조치 이후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6.4)

※ 2009.7.27~28 개최된 제1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에서 중국 왕광야 외교부 부부장의 중국측 입장(△북한의 이유있는 안보우려 고려, △북·미 직접대화 지지) 전달 이후, 미국의 대북 접근방식이 압박에서 대화(8.3~4 클린턴 방북)로 선회한 전례

## II. 천안함 사건의 국제정치적 파급영향

### □ 6자회담 파급영향

○ 2009년 12.5~8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중국은 미국과 북한의 절충한 마련에 분주

- 중국은 ‘북·미 양자접촉→ 예비 6자회담→ 본 6자회담’이라는 절충안을 만들어 미국과 북한을 설득

※ 북한 외무성은 6자회담의 재개조건으로 △유엔제재 철회, △평화협정 논의 보장 등 두 가지를 요구(2010.1.11.)

○ 이러한 중재안에 따라 미국 민간단체(미 헌터대학 자고리아 교수)의 초청 형식으로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미국을 방문하여 보즈워스, 성 킴 등과의 면담을 추진

- 미 국무부의 비자발급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3.26 천안함 사건 발생하여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프로세스가 전면 중단

※ 한국정부는 천안함 사건의 진상규명이 끝나고 사후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6자회담과 관련된 모든 재개 노력의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미국이 이를 수락

○ 2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5.24~25), 한국의 6.2 지방선거 이후 미국이 천안함 문제에만 매달리던 데서 6자회담 재개 노력과 병행하려는 자세를 노정

- 천안함-비핵화문제 관련, '한국의 연계론', '중국의 분리론'에 대해 미국이 양자 입장을 절충한 '병행론'으로 입장 정리한 것으로 해석

## □ 남북관계 파급영향

○ 그 동안 이명박 정부는 '원칙 있는 포용정책'의 기조 아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표방해 왔으나, 이러한 정책의 존속 여부가 시험대에 오름

- 일부 언론에선 이번 사태로 우리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대북 봉쇄정책'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보도

※ 미국 언론들은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유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로 평가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2010.6.3.)

○ 우리 국방전략 중점이 기존에 주변 잠재위협에 대비한 미래전 대비에서, 당면한 북한의 현재적 위협으로 이동

- 노무현 정부 당시 미래전의 대비에 치중한 '국방개혁 2020'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군병력 감축인원 재조정, △축소됐던 육군의 비중 제고 등으로 1차 조정 작업을 끝냄

- 하지만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미래전 대비능력의 구축보다는 당면한 북한군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비로 초점이 옮겨감

※ 미국 부시 대통령 당시 럽스펠드 국방장관의 '군사변환'(QDR2001, 2006)이 미래전 대비에 중점을 둔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의 전쟁에 비중('At War', QDR2010)

- 아울러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되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한미군 평택 이전이 끝나는 2016년경으로 연기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
  - 당초 예정된 2012년에 남북한은 물론 러시아, 대만, 중국, 미국, (일본)에서 정권교체가 예정되어 있는 등 안보불안정 가능성이 높아 전작권 이양을 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

## □ 국제관계 파급영향

- 정부는 이번 천안함 침몰사태에 대해 비록 남북이 정전상태에 있다고는 하나 북한에 의한 전쟁 도발에 준하는 사태로 평가
  - 일각에서는 천안함 사태가 태평양전쟁의 시발이 됐던 '진주만 공습'이나 아프간전의 단초가 됐던 동북아판 '9.11테러사태'라는 평가마저 등장
- 대통령의 특별담화에서 '한반도안보의 중대한 전환점'임을 밝힌 데 이어 통일·외교·국방 3부도 대북조치를 발표하는 등, 정부는 천안함 사태를 북한에 의한 '사실상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전면 대응한다는 자세 피력
  - 안보장관회의가 청와대 지하병커에서 개최되고 대통령의 특별담화가 '전쟁기념관'에서 발표된 점도 이러한 인식을 반영
- 그러나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놓고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 사이의 심각한 이견으로 자칫 '신냉전'을 출현시켜 동북아 지역불안정 및 향후 6자회담 전개에 부정적 영향 우려도 대두
  - 천안함 사태의 원인파악을 둘러싸고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

※ 러시아 전문가의 방한 조사(6.1~6.7)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6.4)가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국측 입장으로 기울어짐

○ 천안함 사건의 파장은 남북한을 뛰어넘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도 참가하는 새로운 파워게임으로 성격이 바뀔 조짐

- 이번 천안함 사태로 남북관계 재정립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주변강대국의 對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주어 향후 동북아 질서재편의 방향에 주목

### Ⅲ. 천안함 사태 처리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과 정책

#### □ 중국의 입장과 정책 변화

○ 중국은 후진타오 국가주석(4.30), 원자바오 총리(5.28~30) 등이 이명박 대통령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건을 북한과 연관 지으려는 한국정부의 입장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

○ 한.중 정상회담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은 국제적 조사와 이에 대한 각국 반응을 중시하면서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천명(5.28)

- 한국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면서도 일방적 '북한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중립적 입장을 견지

○ 6월 1일 방일중인 원자바오 총리는 천안함 사건으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한국이며, 중국도 피해를 면할 수 없다"며 한반도의 안정을 강조

- 중국은 천안함 사건이 한반도전쟁으로 비화할 경우, 「북중우호협력조약」에 따른 불가피한 개입으로 미·중 관계악화와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21세기 중반까지 선진국에 도달한다는 국가전략의 차질을 우려

※ 원자바오 총리는 “성문에 불이 나면 연못 속 물고기에 재앙이 미친다(城門失火 殃及池魚)”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최우선임을 강조

○ 중국은 이번 사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미·중 뉴욕채널을 통해 남·북·미·중 국제검증단 구성을 위해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정전위원회의 부활을 제의하는 등 적극 행보 (『한겨레신문』 2010.5.29)

- 이런 중국측 태도는 천안함 사태를 빌미로, 1994년 군사정전위 대표단 철수로 잃어버린 중국의 합법적인 對한반도 발언권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파악

○ 중국정부는 한국 국방부와 한·미 연합사가 발표한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 및 對潛 훈련에 반발,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중국방문을 거부

- 중국정부는 이번 대규모 훈련의 표면적 이유가 대북 무력시위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한다는 데 있지만, 강화되고 있는 중국 해군력을 서해상에서 견제한다는 해양안보전략의 의미가 깔려있다고 판단

※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군의 가자 민간구조선 공격·살해 사건에 대해 미국이 취한 미온적 태도(완화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중국 북해함대와 가까운 평택항 앞바다에서의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실시 등이 영향



<그림> 한미 연합훈련 및 대잠훈련 예상해역

(이미지 출처: googleearth.com)

## □ 미국의 입장과 정책 변화

- 미국은 천안함 사태를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질서를 뒤흔드는 중대사안이라고 간주, 한국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함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정책을 적극 추진
  - 미국은 급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최대외화보유국 중국의 협조 필요성이 줄어든 지금이 중국의 대북정책 변경을 포함한 동북아질서재편의 호기로 판단
- 미국이 6자회담 재개노력을 중단하고, 천안함과 관련된 대북 압박에 적극 나선 데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노력에 대한 미국 내 懷疑感을 반영한 측면도 있음
  - 미국은 작년 7월 이래 중국의 對한반도정책이 '비핵화 우선'에서 '안정화 우선'으로 옮겨지면서 북·중 경협이 강화되면서 기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유명무실화한 데 대한 불만, 실망과 함께 시정을 추구
  - ※ 당초 오바마 행정부는 북·미 직접대화를 통해 북한의 NPT복귀를 유도한 뒤 이를 국제레짐 강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풀려는 구상[Obama-Biden plan]을 갖고 있었으나, 2009.5.25.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중국의 변심으로 인해 고민과 회의가 지속
- 미국은 단순한 사태해결을 넘어서, 이를 활용해 자국에게 유리한 동북아 질서재편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를 노정
  - 한반도 긴장사태에 대한 적절대응을 위해 오키나와 미 해병의 주둔 필요성을 내세워 미·일간 최대현안인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의 역외이전 문제를 原案대로 관철하는 데 성공
  - 아울러 미국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폭적 지지해 줌으로써 한국에 대해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
  - ※ 현 천안함 사태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윌러스 그랙슨 미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 및 데릭 미첼 부차관보 등 3인이 주도

## □ 북한의 입장과 대남, 대외정책 변화

- 북한은 천안함 사태의 조사발표 앞두고 한·미·일 3국에 의한 대북압박이 한층 강화될 것을 우려하여 계속 미뤄왔던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5.3~5.7)을 전격 단행
  - 북한은 對중국 경제종속과 중국의 내정간섭을 우려하면서도 북·중간 협력증진과 의존심화를 통해 당면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모면은 물론 체제위기 탈출을 도모
    - ※ 김정일 위원장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에서 6자회담 재개조건 마련 용의 표명
-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의 채택이 최대목표가 될 수 밖에 없으며, 대북제재는 의장성명을 근거로 하여 한·미·일 3국 및 EU에 의한 양자제재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임
  - 이미 한·미·일 3국에 의한 대북제재가 시행중이므로 3국 및 EU에 의한 양자적 제재가 추가되더라도 직접적 대북 경제타격은 그리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북한은 우리측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조작극’이라고 전면 부인하며 이명박 정부와는 당국자 대화를 일체 단절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당분간 대남 관계를 전면중단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5.21)를 통해, 미국이 천안함 사건 조작을 승인했으며, 이 사건을 걸어 한반도비핵화 과정을 전면 차단했다고 주장
-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함으로써 북한이 ‘천안함 사건 조작극’ 여론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은 당국자대화는 거부하면서도 국내 NGO 등과의 비공식접촉을 강화하며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등 남남갈등을 조장할 것으로 보임

## IV.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 위기관리의 방향

### □ 천안함 사태의 유엔안보리 제소에 대한 주요국 입장

- 정부는 민군합동조사단의 5.20 천안함 진상조사 결과 이후, 유엔안보리를 통한 북한 규탄 결의/성명과 양자 추가제재를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및 핵포기를 유도한다는 구상 아래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
  - 정부는 천안함 사태를 북한에 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서해상 우발 사태에 관한 남북합의 등 남북간 공식합의는 물론 정전협정 및 유엔헌장 등을 위반한 반평화적인 적대행위로 지목하고 국제사회 동조의 규합 시도
- 미국은 자신이 주도하기보다 한국이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를 주도할 경우 이를 지지하고 일본과 함께 양자간 추가제재에 동참한다는 입장
  - 하지만 북한이 궁지에 몰려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적당히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되 전쟁으로는 비화하지 않도록 한다는 이중적 태도(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 재개모색의 병행)를 취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며 한·미 국제공조로 양자 추가제재에 동참한다는 입장
  - 하지만 하토야마 총리가 전격 퇴진(6.2)하고, 칸 나오토 신임총리 체제가 등장(6.4)하면서 한·미 공조에 동참하는 게 오는 7월 참의원선거에 유리한지 이해득실을 저울질
-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고 동북아 지역안정을 내세워 대북 추가 제재(기존 제재의 실효화 포함)에 반대하는 등 국제공조에 차질이 예상

- 2009.4.5.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의 채택에 중국이 동조하자, 북한이 중국을 간접 비난하는 외교부 성명(4.14)을 내고 뒤이어 2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크게 반발했던 점을 고려
- 러시아는 명확한 입장 표명보다 중국 입장에 편승하면서 국익극대화를 엿보는 기회주의적 자세를 드러냈으나, 자국 전문가의 한국 파견 이후 오히려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
- 5.31~6.7 한국을 방문했던 러시아 조사단은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언(『讀賣新聞』 10.6.7.)

#### □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 천안함 사태에 대해 미국이 단호한 대응자세를 피력함으로써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 출범 이래의 미·일간 갈등을 해소하고 한·미·일 3국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
- 오바마 행정부는 오랫동안은 아니나, 적어도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북한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의 긴장고조를 적절히 활용해 ‘밀린 숙제’를 처리하려 할 것으로 전망됨
- ※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는 한, 당장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대북 압박책을 지속할 가능성
- 이러한 한·미·일 3국 공조체제 구축은 냉전시기의 남방삼각 부활을 연상시켜, 중국·러시아로 하여금 천안함사태에 대한 국제공조보다 북·중·러 북방협력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
- 중국이 북한의 소량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고, 북한이 기존의 남북경협을 포기하는 대신에 북·중 경협 강화를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대북 지렛대 및 발언권을 잃어버릴 위험성 존재

- 천안함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들을 남북관계에서 풀기보다 유엔안보리 회부, 국제회의 성명전 등 과도한 국제화를 통해 한반도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도권을 제약할 가능성도 불배제
- 한반도문제의 과도한 국제화는 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붕괴를 포함한 급변사태 때나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정부의 발언권이 크게 제약되는 문제점 내포

## □ 한반도 위기의 출구전략은?

-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기 위해 단호한 대북 응징의 중요성 못지 않게, 추가적인 긴장고조나 상황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대북정책의 목표에 도달하게 유도하는 것이 긴급요
- 우선, '전략적 모호성'을 탈피, 우리 정부의 대북조치가 원하는 최종상태 (End State)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 다음, 이러한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북조치들의 우선순위 및 추진속도를 설정
- 우리측의 대북조치와 국제사회의 양자적 대북 추가제재를 병행하되, 이명박 정부 임기 종료 전까지 남북관계의 복원을 위한 출구전략에 대한 고려 필요
- 우선, 어떤 상황을 천안함사태의 해결로 볼 것인지(사과·책임자처벌, 혹은 유엔조치의 완료) 국내여론 및 국제사회와의 인식공유가 필요
- 다음, 어느 시점, 어느 조건에서 6자회담 및 남북대화 재개의 전기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로드맵의 마련이 필요
- ※ 과거 북한은 대남도발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아웅산사건, KAL기 폭파사건)를 취해 왔으나 일부 사건(1.21사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강릉잠수함사건, 제2차 연평해전)에서는 직간접 시인 및 유감 표명한 사례도 존재

- 만약 6자회담 재개 노력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측이 직간접적으로 남북접촉의 기회를 만듦으로써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로 활용
    - 6자회담의 대화마당을 통해 천안함 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의 재천명(사과 및 책임자 처벌),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의 개선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상호체면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복원의 분위기를 조성
  - 이번 천안함 사태로 야기된 남북관계의 단절은 실무급 당국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구' 확보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우리 정부의 대북조치가 완전히 시행되지 않고 유엔안보리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모색할 경우 북한에게 오판의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오는 8.15광복절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8.15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본격적인 남북관계의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대북관리 차원에서 '영유아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남북접촉을 개시
- ※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여러 조건이 갖춰진다고 해도, 정상회담의 본격적인 추진은 G-20 서울 금융정상회의(11.11~12)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추정 

### **<참고> 금년도 향후 국내외 주요일정**

- 6 .25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일
- 7 .11 일본 참의원 선거(→7.25로 연기 가능성)
- 7 .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8개 선거구)
- 8 .15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 9 . 9 북한 정권 창건일
- 10.10 북한 노동당 창건일 (\*10.11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일)
- 10.31 상하이 엑스포 종료(5.1~10.31)
- 11. 2 미국 중간선거 실시
- 11.11 제5차 G-20 금융정상회의 개막(한국 서울, 11.11~11.12)
- 11.12 아시안게임 개막(중국 광저우, 11.12~11.27)
- 11.13 APEC 정상회의 개막(일본 요코하마, 11.13~11.14)

| 평화재단 제40차 전문가포럼 |  
천안함 사태 이후 동북아 정세변화 평가와 전망

# NOTES